

2018년 5월 4일

csf@kiep.go.kr

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의 한·중·일에 대한 평가



- 미 재무부는 2018년 4월 13일 주요 교역국들의 경제 및 환율정책에 대한 평가를 담은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며, 해당 보고서에서 한·중·일을 포함한 6개국을 “관찰대상국”으로 지정¹
 - 2015년 「교역촉진법」에서 제시한 세 가지 기준²으로 판단한 결과, 한·중·일은 다섯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됨.
 - 이번 보고서의 경우, 한·중·일 각각 230억, 3,750억, 690억 달러 수준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해 3국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으며, 한국과 일본은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각각 5.1%와 4.0%로 기준치를 초과
 - 한편, 일본은 6년 이상 외환시장 개입이 없었고 한국은 개입정도가 크지 않으며, 중국의 경우는 오히려 외환을 매도하는 방향으로 개입했다고 판단해 3국 모두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비난은 피함.
- 한국과 중국에 대한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와 한·중·일 3국에 대한 내수 시장 강화 및 막대한 무역수지 불균형 시정을 요구한 점은 과거 보고서들과 유사하나 권고 내용 일부 추가
 - [한국] 외환시장 투명성 개선에 대해 꾸준히 지적받아왔으나,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해야한다는 권고 사항 추가
 - [중국] 보고서에서 “매우 우려됨(strongly concerned)”이라는 표현과 함께 미·중 무역문제 해결이 더딘 점을 지적
 - [일본] 막대한 대일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였으며, 내수와 경상수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측의 노력 요구
 - 보고서에서 대일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미·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일본에 강한 압력을 보인 것으로 일부 언론이 주장했으나³, 2018년 4월 17~18일 진행된 미·일 정상회담에서 환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음.

1 해당 보고서는 반기별로 발간되며, 「종합무역법(1988)」과 「교역촉진법(2015)」에 의거하여 “환율조작국” 및 “심층분석대상국”을 지정하고, 일부 조건만 충족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. 이번 보고서에서는 두 법안에 의거하여 평가한 결과, “환율조작국”과 “심층분석대상국”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으며, 중국, 일본, 한국, 독일, 스위스, 인도 6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

2 미 재무부는 「교역촉진법」에 의거하여 다음 세 가지 세부 기준치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“심층 분석 대상국”으로 지정 (모두 충족 시 “심층 분석 대상국”, 두 가지 충족 시 “관찰대상국”)

①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

② GDP의 3%를 넘는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

③ 지속적인 한 방향으로의 외환시장 개입(연간 GDP 대비 2%를 초과하며, 1년 중 8개월 이상 지속되는 외환 순매입)

3 「米, 対日FTAにあり圧力 為替条項・輸出規制も」(2018)『日本経済新聞』(2018.4.15.).

표 1. 관찰대상국 지정 기준 및 항목별 평가

	대미 무역수지 (십억 달러)	경상수지 (GDP 대비 비율%)	순외환시장 개입	
			GDP 대비 비율(%)	8개월이상 순외환매입
중국	375	1.4	-0.6	x
일본	69	4.0	0.0	x
한국	23	5.1	0.6	o
독일	64	8.1	-	-
스위스	14	9.8	6.6	o
인도	23	-1.5	2.2	o

주 : 붉은색은 기준치 초과 항목

자료 : 미 재무부, "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(2018 April)"

- 미국이 무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의 환율 관련 정책과 차후 발표되는 환율보고서 내용에 면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환율보고서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였으며, 미·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과의 무역적자가 과도한 점을 언급하는 등 앞으로도 무역 및 환율 이슈가 고조될 가능성이 있음.
 - 한편, 외환시장 개입 공개 여부와 관련해 현재 기획재정부와 미 재무부 및 IMF 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, 이르면 5월내로 구체적인 공개 방침이 공표될 예정임.
 - 대외신인도나 환율보고서의 한국에 대한 평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, 공개 내역 및 시기에 따라 외화 유출이나 환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개 방침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 **CSF**

참고자료

Nikkei Asian Review, US Treasury, 日本経済新聞 등

(작성자 :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동아시아팀 연구원)

4 「정부,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신중해야」(2018)『매일경제』(2018.4.30.).